

# 현행 윤리·도덕교과서 ‘불교 홀대’ 심각

## 14일 불광연구원 세미나서 현직 교사들 지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초·중·고 윤리·도덕 교과서에 불교 사상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광연구원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는 초·중·고 윤리·도덕교과서 15종에 나타난 불교 서술체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심을 갖는 사람들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불교관련 전공자들 내지는 불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며, 더불어 교과서 집필에서 불교관련 전공자들이 참여해야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양종교·유교에 비해 '빈약' 제작에 불교학자 참여 필요해

스토아학과, 그리스도교와 같이 동서양 방법 중 하나로 제시돼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주의 극복 불교윤리 담아야

이철주 경기 상현고 교사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제와 내용' 발표에서 "교과서에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 윤리적 지혜가 서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교계 학자들 간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심화된 고교 윤교 윤리분야 서술과 비교하면 불교는 초기 불교의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등에 머물러 있다"며

"유교는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적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성리학의 양명학에서 이론, 심성론, 수양론을 다루고, 퇴계와 율곡으로 이어지는 한국 성리학의 사단칠정론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까지 전개하지를 기술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 윤리교과서 기술 어떻게 할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가 학제적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호교적인 입장에서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윤리사상에서 불교사상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도덕 교육에 불교계가 경제학 사학의 구조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이웃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교윤리학자가 주도하는 교과서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불교 전공자가 교과서를 집필할 정도로 학계의 힘을 키우고 비전공자들에 의해 집필된 내용도 제자리를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文 총리 후보, '종교편향·민족비하' 망언

## 2011년 은누리 교회 강연... "식민 지배는 하나님 뜻"



### "위안부 역사 필요 없다" 주장 교계 반발, 총리 후보 철회 전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과거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재직 중인 서울대 강의에서도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와 일반 언론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1년 용산 은누리교회에서 "하나님께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의의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라며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어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족성에 대해서는 "조선 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 후보자의 발언과 칼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4월 강의에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자질의 의심케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중론이다.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역사관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도 편향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생존해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배춘희 할머니가 별세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전해진 문 후보자 발언때문에 할머니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아베총리가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역사의 식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인사다. 사회통합을 위해 나서야 할 분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후)는 지명 철회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6월 1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리 후보의 지명 철회와 대대적인 국정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 "진영논리 삼팔선 넘어 해원상생의 길 열자"

## 화쟁 100일 순례 10일 회향 '대한민국 아단법석' 선언해 "진영 타파, 진실담론 세울 것" 삼화도량, "전시행정" 비판도

"우리는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고 헛되게 않도록 천일동안 기도하고 순례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희망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 통합 담론을 생산해낼 대한민국 아단법석으로 확대·전환됐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6월 10일 조계사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아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좌우희생자 합동위령제도 함께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한민국 아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이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를 통해 확인된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 편만 옳다고 주장하는 양극단은 진실일 수 없다. 한쪽에서 치우친 극단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의 길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서 이를 토대로 안전한 사회,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면서 "은 국민이 상주된 심정으로 천일기도, 천일 순례를 하는 마음으로 천신인 민심을 형성할 '대한민국 아단법석'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갈 것" △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6월 10일 조계사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아단법석 시민위원회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순례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재원 기자**

진영의 벽을 허물고 은 국민이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 사는 길을 열어야 할 것 △진실 화해, 화쟁 회통, 국민 통합의 담론을 생산할 대한민국 아단법석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 등을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와 대중적 공감대가 없는 100일 순례를 1000일 아단법석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모임 삼화도량(대표 영담)은 6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4시간 생명평화의 염원이 꺼지지 않도

록 하겠다며 거창하게 시작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도 텅 빈 채 조계사 입구에 방치됐다"면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역시 내용이 결지레에만 신경 쓰는 '전시성 줄속 행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속 빈 강정' 식의 전시성 사업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종도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밀양 송전탑은 국민 무시하는 폭거"

## 조계종 환경위 등 긴급 성명서 발표

밀양 송전탑 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조계종이 무자비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10일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정부와 한전 측에 즉각 주민과 대화에 응할것을 주장했다. 환경위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 공권력 투입을 두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온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단언한 후 "그동안 밀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와 정치계, 시민사회 등이 밀양 주민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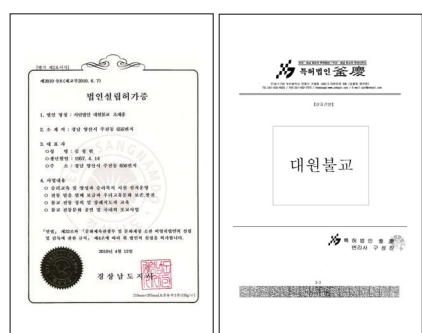
보인 지지와 응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역시 고압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불행한 결과가 불보듯 뻔한 일"을 정부와 한전이 자초했다는 입장이다. 결사본부 측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불행이 발생한다면 공동체에 절망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밀양 주민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하고 정치·종교계에 중재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을 멈추고 대화장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배현진 기자**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증 안내 ◆

- 1) 입증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영할관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증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 총무원 070-4187-4747
  -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증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종 정 청 봉 석 정 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 종정실 의전실장 황정재)

대원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동아메일신문사 사장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철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윤오 재무부장 석법담	부 원 장 석옥암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혜주	총무원장 석지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http://www.dwbk.net)

- 부 고 -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오(김봉규)스님 모친상

- ▶ 상 주 : 김봉규(혜오스님)
- ▶ 고 인 : 박순석
- ▶ 빈 소 : 부산 주례 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05호실
- ▶ 발 인 : 6월 13일 오전 6시
- ▶ 문 의 : 010-3565-2462

\*천도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며 막제는 양력 7월 29일 회향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